민주당 '세제 완화' 불 당겼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완화법 발의
중도층 겨냥한 '우클릭' 평가…금투세·종부세 완화는 당내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완화에 나서면서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 행보와 맞물려 금투세와 종부세 완화도 추진하리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지난 20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이 같은 방안은 사실상 대선의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 대표도 지난 18일 당 대표 수락 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에 반대하지만, 상속세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시각을 뒷받침했다.

다만 여전히 세 부담 완화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작지 않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통화에서 "서울 집값이 급격히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도 늘어 1가구 1주택자들이 포함되는 데 대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일치가 있다"면서도 "공제 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상속세 완화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임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개정안대로 당론을 모으는 데는 조심스러운 의견으로 읽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종부세를 놓고도 이 대표와는 견해차를 보여 왔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종부세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우회적으로 완화에 반대하는 견해를 보였다.

이처럼 지도부 안에서도 이견이 노출된 만큼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곧바로 금투세나 종부세 완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적어도 이들 문제만큼은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투세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이어서 예산안 심사 때 세입·세출 규모를 봐가며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금 나오는 견해차는 시간을 두고 토론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허은아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등 개혁신당 지도부가 22일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 찾은 개혁신당 "지역 현안 해결 협력"

시의회서 현장최고위…강기정 시장 만나 약속

개혁신당 지도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아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을 부각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다.

개혁신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과 국립의대 유치 등 광주·전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혁신당이 광주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부터 서진(西進) 정책을 이어오면서 오는 10월 치러지는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호남에 후보를 세울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허은아 대표는 "광주 자영업자 폐업률이 지난해보다 12.8% 급증했고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수도 크게 늘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면 지방 경제에는 초비상 경고등이 번쩍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허 대표는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죽는다. 지방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며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지역 경제 부흥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 부각된 민주당의 '호남 홀대론'을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요 구성원은 물론이고 당원도 이제 더 이상 호남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호남을 잡아둔 물고기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호남 몫으로 지명하는 것이 호남 정치를 위한 민주당의 최소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또 국립의대 유치를 놓고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는 데 대해 "왜 전남에는 전남이 정한 하나의 학교만 의대 설립이 가능한 것인가"라며 "이 싸움을 윤석열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기자회견 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다.

강 시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교통 기반 시설 신속 확보, 인공지능(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동차 부품 재제조·순환 경제 체계 구축 등 광주 주요 현안에 대한 개혁신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 사업은 교통 대책과 소상공인 상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혁신당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대표는 "아픔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광주를 위해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까지 연장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 일몰을 앞둔 도심복합사업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방식으로,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천호'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재섭,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한민수 의원 등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들 의원의 법안과 정부 의견을 통합 심의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택시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사업비 50% 의무 지원"

정진욱,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50%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반도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은 전력·용수·폐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하지만 관련 규정상 재량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에 뒤떨어지고 있다.

정진욱 의원 "첨단산업 분야 투자와 관련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세제지원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투자할 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8인치 생산시설 투자 기업은 신규 장비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고장비 구매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면서 "중고장비 투자 비용 또한 신규장비 가격의 약 8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고 수급도 불안정한 만큼 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소멸, 청년 중심 정책전환서 해법 찾아야"

조계원, 지역문화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조계원(여수을)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지역분권과 청년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했다.

이 토론회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회문제인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청년기본소득과 지역문화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해법을 찾기 위해 '문화연대'가 함께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이원재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전환과 지역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공동대표)가 '청년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박용선 춘천문화재단 도시문화센터 예술지원팀장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와 청년 예술인을 위한 지역문화 정책 과제들'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어 토론자로 고윤정 영도도시문화센터 센터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오진식 여수시 청년정책협의체 회장이 참여했고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가 사회자로 함께했다.

조 의원은 "지방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다"면서 "청년들이 정주하지 않는 지역소멸의 문제를 청년기본소득과 지역문화정책 대전환에서 그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